

경찰수사론

6주차

이정덕 교수

I. 범죄수사의 방법

- ① 수사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형소법 제199조 제1항)
- ② 범죄수사의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두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임의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 ③ 강제수사는 강제수사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
- ④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법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요구된다.

I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수사	강제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요구 -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 실황조사 -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 축탁수사 - 공무소 등에서의 사실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구속 - 압수.수색.검증(임의제출물의 압수 포함) - 통신제한조치 - 수사상 감정유치 - 수사상 증거보전 - 수사상 증인신문 - 기타 감정에 필요한 처분

IV.현행범인 체포

1. 의의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가능, 사인도 가능, 영장주의의 예외
2. 요건

현행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실행 중인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아직 범죄종료에 이르지 아니한 자 ② 미수범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충분, 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 개시 -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결과발생까지는 필요없다) ② 범행과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행 후의 경과, 범인의 거동, 휴대품, 범죄의 태양과 결과 등
준현행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자 ③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④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흥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p>*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자는 광의의 현행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p>
범죄의명백성	- 현행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가벌성	형식상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필요성	①도방 ②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판례)
경미범죄 특칙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 국회가 개회 중일 때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절차

경찰관 체포시	①피의사실 등 고지 → ②현행범인체포서 작성 → ③현행범인체포원부 기재 → ④체포통지 → ⑤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사인 체포시	①현행범인 인도 → ②피의사실 등 고지 → ③현행범인인수서 작성 → ④현행범인 체포원부 기재 → ⑤체포통지 → ⑥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피의사실 등 고지	①피의사실의 요지 ②체포이유와 ③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④변명할 기회를 준 후 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
체포서	-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인수서	-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체포자의 성명,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은 후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기재사항	- 현행범인 :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 - 준현행범인 :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
체포통지	- 통지시한 :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대통령령), 형소법은 '지체없이' 로 규정 - 통지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 영장신청 : 체포 후 36시간 이내,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서 관할구역에서 체포시 체포지에 인도원칙 - 영장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 구속기간 :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10일)
체포적부 심사청구	-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의2)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V. 구속

1. 의의

- ①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비교적 장기간 구인·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구금으로 체포를 전제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 ③ 어떠한 경우라도 피의자를 구속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다.

2. 요건

범죄혐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객관적 혐의)
구속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망하거나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경미범죄 특칙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재구속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되었다가 석방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08조 제1항). - 구속적부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경우,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14조의3 제1항).

3.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형소법 제70조 제2항)

- 법원은 구속사유 심사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 재범의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4.절차

사전구속영장	①구속영장 신청서 작성 및 신청부 기재 → ②영장신청 → ③영장청구 → ④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 ⑤영장실질심사 → ⑥영장발부 → ⑦영장제시 및 집행 → ⑧피의사실 등 고지 → ⑨구속영장 집행원부 기재 → ⑩구속통지(24시간 이내)
사후(체포후) 구속영장	①구속영장 신청서 및 신청부 기재 → ②영장신청 → ③영장청구(48시간 이내) → ④영장실질심사 → ⑤영장발부 → ⑥영장제시 및 집행 → ⑦피의사실 등 고지 → ⑧구속영장 집행 원부 기재 → ⑨구속통지(24시간 이내)

(1)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절차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발부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않은 경우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 구속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여러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 인치구금할 장소 -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더욱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 필요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2)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
필요적 심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실시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 - 단, 미체포된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심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심문 생략 가능
심문기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된 피의자 :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 미체포 피의자 :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심문기일 등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 - 즉시, 미체포피의자 -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청구서 및 자료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의 규정된 서류의 열람 제한에 과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심문기일 출석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 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심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분리심문 :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심문조서 작성 :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문시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심문의 비공개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의 고지 :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구속기간 불산입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3)구속영장 집행 및 집행 후의 절차

검사지휘	-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영장제시	-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구속영장을 제시	
긴급집행	- 구속영장 발부 + 미소지 + 급속을 요할 때 - 피의사실의 요지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 - 집행완료 후 신속히 구속영장(원본) 제시	
피의사실 등 고지	①피의사실의 요지 ②체포이유와 ③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④변명할 기회를 준 후 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집행원부 기재	- 구속영장 집행원부에 영장번호, 피의자, 죄명, 영장유효기간, 처리상황 등을 기재	
구속통지	통지시한	구속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대통령령) *형사소송법은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통지방법	반드시 서면으로 *경찰관은 구속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그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함.
	통지대상	①변호인이 있는 경우 - 변호인에게 ②변호인이 없는 경우 : 직계친족, 배우자,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 ③통지대상이 없는 경우 :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 ④통지대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통지

송치 및 구속기간	구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과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에서 제10조 위반의 범죄는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찬양고무죄, 불고지죄는 연장할 수 없다(헌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죄)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최장 구속기간이 30일이다.
	구속기간 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 - 감정유치장에 의한 유치기간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항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불가
	보증금납입 조건부석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VI. 압수.수색

1. 의의

압수	-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수색	-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관계	- 압수는 수색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수색은 압수를 목적으로 한다. - 압수와 수색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무상 함께 행하여지고 영장도 '압수.수색영장' 한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2. 압수의 종류

압류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
영치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취득과정이 임의적
제출명령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법원)	

3. 압수.수색의 요건

범죄의 혐의	- 범죄의 혐의가 구속의 경우 요구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단순히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단순한 혐의 또는 최초의 혐의로도 충분하다.
사건관련성	-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강제처분 필요성	-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강제처분에 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임의수사에 의해서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
비례성	-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함

4. 압수.수색의 대상

우체물 (형소법 제10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사상비밀 (형소법 제1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공무상비밀 (형소법 제1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할 수 있다. -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업무상비밀 (형소법 제1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 약종상,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공인회계사, 대서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세무사, 한의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압수.수색의 절차

①압수.수색영장신청서 작성 및 신청부 기재 → ②압수.수색영장신청 및 청구 → ③영장발부 → ④영장제시 및 집행 → ⑤압수증명서 교부 → ⑥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 → ⑦사후 절차

영장 신청.청구.발부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의 청구 → 판사의 발부 -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하여 수색할 장소.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검증할 장소.신체 또는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영장 신청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백히 기재해두어야 한다.
	소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의 신원, 죄명,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영장의 유효조건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장집행	집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다만, 공소제기 후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영장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집행 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속에 있어서와 같은 긴급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당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출입금지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퇴거 등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개봉 등 :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폐쇄 등 : 영장의 집행을 중지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압수조서
압수목록

- 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에도 작성)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한 경우 거래내역의 복사본은 압수물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거래내역 복사본을 기록에 첨부하고 별도로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 ② 압수조서는 증거를 보존하는 서류로서 중요하므로 실제 압수한 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③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압수물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④ 실황조사서.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조서와 목록에 간인)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으나 압수목록은 작성해야 한다.
- ⑤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 압수조서에 첨부하고 압수 목록에도 기재한다.
- ⑥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하되, 수명이 관련된 경우는 압수물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적시한다.
- ⑦ 수사하는 사건명을 기재하되, 수죄인 경우는 압수물에 해당하는 죄명을 기재한다.
- ⑧ 수색결과, 즉 물건의 소재, 발견장소, 품종, 수량, 발견의 경위(발견자), 압수사실,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한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⑨ [압수경위]란에 참여인의 참여여부와 영장의 제시여부 등 합리적인 사유를 먼저 기재한 다음에 압수처분의 경위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⑩ 압수목록 작성시 압수물이 돈일 때에는 수표, 지폐의 액면에 따라 구분, 기재하고, 피압수자와 소유자를 특정하고, 동일인 여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수색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압수와 수색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수색조서로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참여인]란에는 참여인의 주거.직업.성명.연령.참여자격 등을 기재한다. - [수색결과]란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사실과 영장제시여부, 영장없이 행한 사유 등 합법적인 사유를 먼저 기재하고, 수색결과, 즉 물건의 소재, 발견장소, 발견자, 발견의 경위, 압수사실(또는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여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 등을 참여하게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예: '급속을 요하므로 주거주 등을 참여하게 하지 못하였음')을 기재한다.
압수.수색 증서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물이 있는 경우 압수목록을 기재한 압수증명서를 교부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목록은 소유자가 아닌 보관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다. - 압수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 취지의 수색증명서를 교부한다.
사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장의 기록첨부 : 압수.수색영장은 집행일시와 집행자의 이름을 적어 기록에 첨부한다. - 영장의 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하거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6. 압수수색의 제한

야간집행 제한 (형소법 제125조)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기재 불필요)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공개된 시간에 한함)	
참여제한	당사자참여	-.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책임자 참여통지	-.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거주 간수자 참여	-.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주거주,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자 참여	-.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수색을 해야한다.
	성년의 여자 참여	-. 여자의 신체에 대해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검사시에는 성년의 여자 또는 의사를 참여

7.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살인 피의자 A가 친구 B의 집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친구 B의 집을 수색하는 경우 *피의자를 추적하여 건물 내에 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체포.구속 그 자체에 해당되고 여기의 수색에는 해당되지 않음
체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은 반드시 체포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수색과 체포의 시간적 접촉성은 불필요
제3자의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의 주거도 수색대상에 포함(다만,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 필요)
야간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을 요하는 경우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거주나 간수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참여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그 사유(예: '급속을 요하므로 주거주 등을 참여하게 하지 못하였음')를 압수조서나 수색조서에 기재
사인 수색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일반 사인은 타인의 주거 수색 불가
사후영장	불필요

(2)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의의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가능
시간적 접착성	-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필요 - 피의자가 있는 장소에서 압수.수색한 이상 체포의 전후나 성공여부는 불문 - 먼저 체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허용
장소적범위	- 피체포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 제한
압수.수색 대상	- 당해 사건의 증거물 :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 흉기, 도주의 수단이 되는 물건 및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한한다. - 별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임의제출을 구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압수 *살인사건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별건 장물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발견 → 임의제출을 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살인사건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마약발견 → 임의제출 거부시 마약소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마약은 영장없이 압수가능
야간집행 가능	-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거주나 간수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참여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사유(예:'급속을 요하므로 주거주 등을 참여하게 하지 못하였음')를 압수조서나 수색조서에 기재
사후영장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초과 불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반드시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한다. -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소법 제216조 제2항)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집행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이므로 법관에게 결과보고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야간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거주나 간수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참여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사유를 압수조서나 수색조서에 기재

(4)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형소법 제217조)

의의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가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소유.보관하는 물건 -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긴급성) -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사후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초과 불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소법 제216조 제3항)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사람이 맥주집에서 살해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맥주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야간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거주나 간수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참여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그 사유를 압수조서나 수색조서에 기재
사후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형소법 제218조)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살인 피의자 A가 도주하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지나가던 행인 B가 발견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유취득의 방법이 강제적이 아니므로 임의처분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일단 압수된 후에는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으로 인정되고 있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물 또는 물수물에 제한되지 않음 -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기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
압수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임의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8. 압수물의 처리

(1)자정보관의 원칙 : 압수물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함이 원칙

(2)위탁보관(타인보관)(형소법 제130조 제1항)

대상	- .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
검사지휘	- . 위탁보관을 함에도 검사의 지휘 필요(형소법 제219조, 제130조)
위탁방법	- .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 - . 보관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임치료 청구 불가

(3)대가보관(형소법 제132조)

대상	아래의 압수물이 멸실.파손.부패.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 또는 보관이 어려운 경우(변질우려)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개정 형소법 제132조 제2항) - . 몰수할 압수물(필요적 몰수 + 임의적 몰수)이나 - . 환부 대상 압수물로서 환부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대가보관은 몰수물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개정 형소법에서는 환부대상 압수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대가보관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
검사지휘	- . 대가보관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 필요(형소법 제219조 제130조)
통지	- .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압수물의 대가보관을 위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 .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

(4)폐기처분(형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대상	- .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단,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 -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염려 또는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소유자 등 권한있는 자의 동의 필요)
검사지휘	- . 폐기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 필요(형소법 제219조, 제130조)
폐기조서	- . 폐기 시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

(5)환부

의의	-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 수사기관의 처분
필요적 환부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체포시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 환부하여야 함. (예: 증거에 공할 물건이 아니거나 몰수대상물도 아닌 물건 등)
절차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함. -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환부결정을 해야 함. -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효력	- 압수의 효력은 상실된다. - 압수를 해제할 뿐이며, 환부를 받은 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님. -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인 환부 원칙	- 수사관이 범죄와 관련되어 압수한 압수물을 환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함. - 그러나 압수장물의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형소법 제134조) -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환부가 불가능하므로 제출인환부를 해야 한다.(대법원 84모38) -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 (형소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6)가환부

의의	-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
대상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일지라도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가환부할 수 있다. (임의적 가환부)
절차	①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의 청구 → ②검사.피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 *경찰관은 압수물의 가환부 처분을 위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가환부 의무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필요적 가환부)
효력	- 압수자체의 효력을 유지한다. -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도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형소법 제333조 제3항)

(7)수사기관의 환부.가환부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위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